

칼럼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화 가능한가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차기회장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 자금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엔지니어링시장은 선진국 업체들의 주무대였고, 국내 업체들은 협력사 또는 하도급사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설립된 1974년 이후 지난 40년 간 우리 업체들은 국가 경제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양적, 기술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요 기반 인프라 시설망의 구축과 함께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사회 복지로 변함에 따라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 결국 몸집이 커진 우리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국내 공공 재정시장에 안주해 왔었다. 물론 일부 대형 엔지니어링사 중심으로 ODA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해외 진출은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전략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당당히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까?

첫째,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일하게 국내 엔지니어링 법률 및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엔지니어링사들이 국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이 해외에서도 시행착오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타당성조사(F/S), 개념·기본 설계, 종합적 사업관리(PMC)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타파해야 한다. 개별 부처, 개별 법에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점점 늘어나는 유사 업종 면허 신설, 기술자 등 급체계의 상이로 인한 기술자들에 대한 이중 관리,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추가 업무 지시에 대한 대가 미지급 사례 등 업계에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들을 손질해야 한다.

이제껏 우리 엔지니어링 관련 정부 기관들은 기술 진흥이니, 글로벌화 지원이니 하는 명분 아래 각종 행정 규제를 양산해 왔다. 이러한 발주기관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하루빨리 사라짐으로써 글로벌 엔지니어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ERIK